

#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선호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Self-employed and Preference for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come Class-

이재완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Jae-Wan Lee(noso791@gmail.com)

## 요약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두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간에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라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 중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즉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자영업자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인상속도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분석 결과, 자영업자는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불만이 강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처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중심어 : | 최저임금 인상 속도 | 자영업자 | 소득 계층 | 조절효과 | 다항 로짓분석 |

## Abstract

There has been a lively debate between self-employed and wage workers on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s. Minimum wage is a redistributive policy that evokes confrontation and conflict whereby individuals' views on the policy coincide with their material self-interest. With this in mind, the researcher analyzed whether an individual's labor market status was explanatory to his/her view on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Moreover, in light of the likelihood that the varying degree to which self-employed can afford minimum wage hike affects their differential preferences for the policy, the researcher attempted to identify whether there was a moderation effect of income class on the relationship. In the actual analysi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employment policy survey dataset using a multinomial logit model. The results suggest that, among self-employed, 'gradual increase' and 'rapid increase' of minimum wages are less preferred vis-à-vis 'minimal increase,' which is the reference. As to the moderation effect, when a self-employed has a middle-income class status, his/her negative preference for the policy is likely to be attenuated. On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subsidizing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most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speed at which minimum wages rise, would be an effective prescription on reducing social conflicts.

■ keyword : |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 The Self-employed | Income Class | Moderating Effect | Multinomial Logit Model |

접수일자 : 2019년 01월 31일

수정일자 : 2019년 03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3월 14일

교신저자 : 이재완, e-mail : noso791@gmail.com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득 계층이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여 왔으며, 2018년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38%가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8,350원으로 다시 10.9%가 인상되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인상은 당해 연도의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1].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과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존재한다. 특히 저임금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는 고용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2]. 그에 따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의 악화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한다는 속도조절론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의견을 대변하여 경영계와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속도 조절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4].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에 대해 자영업자 등 고용주와 근로자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5].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선호는 '예정대로 인상'이 38.7%, '전년도 금액으로 동결'이 38.8%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6]. 이와 같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대한 여론조사는 존재하지만,

이는 단순히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였을 뿐 엄밀한 인과관계를 밝힌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자영업자 여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선택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근로자들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주장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선호가 같을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정책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모두 동일한 정책선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변창 및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한다는 주장이 존재하고,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들은 분배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을 더 선호한다는 주장도 있다[7]. 이러한 주장을 정리하면 자영업자들도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책 선호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항 로짓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의 관계를 소득 계층이 조절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의

#### 1.1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은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노동시장에서의 가격규제에 해당한다[8]. 정부가 법으로 최저임금을 규제하는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1970년대 들어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9].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운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의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져서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1].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1.2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선행연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등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쟁에 대해 미국의 실증 분석들은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한다[10]. 우리나라의 실증연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1].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미국의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활용하여 분석한 Aaronson과 그의 동료들(2012)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12]. 한편 우리나라의 오상봉(2015a)은 최저임금이 소비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분석하였다[13].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영국의 기업들을 연구한 Draca와 그의 동료들(2011)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받는 기업이 덜 받는 기업보다 이윤이 크게 감소한다고 하였다[14]. 우리나라 기업들을 분석한 오상봉(2015b)은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초과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하였다[15].

위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그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되었을 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선호나 태도 등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

## 2. 자영업자의 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 2.1 자영업자의 의의

자영업자(the self-employed)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법률상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16].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그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 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자영자’를 합한 개념이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주’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6].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557만 명이며 무급 가족종사자 112만 명을 포함하면 669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17].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규모는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할 만큼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과잉경쟁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대부분 영세하고 구매력이 한정된 지역에 밀집되어 생산성 또한 낮아 자영업자 위기가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2.2 자영업자의 정책 선호에 대한 연구

개인들의 정책 선호, 특히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책 선호나 태도를 분석한 논문들은 주로 개인의 자기이해(material self-interest)를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자신에게 귀착되는 비용과 혜택에 대한 합리적 선택에 근거하여 그 정책 선호를 결정한다고 한다[18]. 이들은 정책 선호가 시장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19]. 재분배정책의 편익 및 비용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또는 직업, 소득 계층, 연령, 성별 등이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20].

자영업자들의 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자기이해는 주로 개인수준의 정책 선호를 결정하는 것으로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소득 등 지위의 안정성에 따라 정책 선호를 결정한다고 본다. 반면 계급이론 중 뿌떠부르주아 이론과 근대화이론의 가정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자기사업의 경영자 또는 고용주로서 자신의 소유권과 사업기회를 보호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한다고 본다[7].

과거 자영업자들의 정책 선호를 분석한 연구들은 별로 없었지만, 최근 몇몇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대립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들의 정책 선호를 분석하였다. 최중호(2016)는 2007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영업자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이슈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은 사회보장 확대와 같은 재분배정책보다는 소유권 보장을 강화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하였다[7]. 그러나 이 연구는 엄밀한 정책 선호가 아닌 관심이 가는 정책이슈를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최영준·이승준(2015)은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경제위기 이후 신규 진입한 자영업자들의 복지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규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그러나 이 연구는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08년과 2009년 신규로 진입한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 2.3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 시장 내에서의 지위가 고용주인지 피고용인지에 따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 한편 노동시장 내의 지위가 동일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재분배정책을 더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22]. 또한 노동시장 내의 지위와 소득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23].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주인 자영업자라는 지위는 그들의 사업능력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불안정에 대한 노출은 소득 계층에 따라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Rehm, Hacker와 Schlesinger(2012)는 노동시장 내의 지위가 불안정하더라도 소득 계층이 높은 경우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가 낮다고 분석하였다[23].

### 3. 선행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자영업자들

의 정책 선호를 특정 정책이 아닌 광범위한 재분배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평가적 견해를 나타내는 선호가 아닌 관심의 정도로 좁게 해석해 분석하였을 뿐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광범위한 재분배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가 아닌 특정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는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였다. 둘째,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 간 정책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자영업자라는 지위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는 정책에 대한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자영업자 내의 소득 격차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들을 동일한 계층으로 보지 않고 각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정책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III. 연구의 모형과 방법

### 1.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 1.1 연구의 가설

자영업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주라는 자신들의 계급적 지위에 따라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하므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서도 보수적일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반면, 자영업자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영업자들은 그 취약성으로 인해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여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관대할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자영업자 여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들보다 소득이 더 분산되어 있고, 그들 내부에서의 소득 양극화

정도가 더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7]. 동일한 자영업자들이더라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정책 선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수용하는 정도는 소득 계층마다 다르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 인상 비용의 상대적 크기는 저소득 자영업자가 더 크게 느낀다고 한다[24]. 최저임금 인상 비용에 대한 상대적 민감성이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대해서도 같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 계층이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소득 계층이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1.2 연구모형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로 ‘인상 최소화’를 기준으로 하여, ‘완만한 인상’, ‘신속한 인상’ 등 인상 속도 간의 선택이다. 독립변수는 ‘자영업자 여부’로 설정하였다. 조절변수는 ‘소득 계층’으로,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자기이해와 관련된 ‘성별’, ‘연령’, ‘교육’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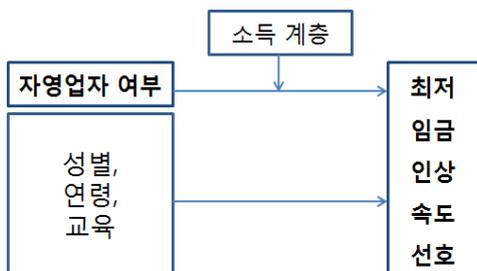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항 로짓분석이다. 종속변수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인상 최소화’, ‘완만한 인상’, ‘신속한 인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여러 대안들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특정 대안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을 검증할 경우 다항 로짓모형을 적용한다[25]. 본 연구는 여러 선택 대안들 중 준거집단인 기본 범주(base category)로 ‘인상 최소화’를 설정하였다.

## 2. 데이터의 출처와 변수의 측정

### 2.1 데이터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와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26].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면접조사였다. 표집은 2017년 7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인구구성비에 맞게 1,5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 이다[26].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를 제외한 1,34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2 주요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 2.2.1 종속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로 조작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다음 진술 중 어느 진술에 공감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①‘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인상 최소화, 기준), ②1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공감하나, 천천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완만한 인상), ③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만원 내외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속한 인상)’라는 응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2.2.2 독립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자영업자 여부

다음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영업자 여부’는 응답자

의 직업으로서, “귀하께서 직업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자영업자’와 ‘그 외의 일을 한다’고 응답한 ‘비자영업자’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 2.2.3 조절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소득 계층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소득 계층은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귀택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임대소득, 이자소득, 보너스 등을 포함)”로 질문하여 그 응답이 ‘200만원 미만(기준)’을 저소득층, ‘2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을 중산층, ‘600만원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추정할 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27], 중위소득 50% 미만을 저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한다[28]. 2015년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400만 3천원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월소득 400만원을 중위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 계층을 구분하였다.

### 2.2.4 통제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우선 통제변수 중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그 응답이 남성인 경우 0값, 여성인 경우 1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만 나이(단위: 세)로 “귀하는 올해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라고 질문하여 그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으로 “학교는 어디까지 마쳤습니까?”라고 질문하여, 그 응답을 ‘①고졸 이하, ②대제, ③대졸, ④대학원 재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IV. 분석의 결과

### 1. 주요 기초통계

#### 1.1 응답자의 주요 특성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주요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662	49.37
	남성	679	50.63
교육	고졸 이하	455	33.93
	대제	82	6.11
	대졸	669	49.89
	대학원 재 이상	135	10.07
연령	20대	215	16.03
	30대	249	18.57
	40대	291	21.70
	50대	275	20.51
	60대 이상	311	23.19
자영업자 여부	비자영업자	1,167	87.02
	자영업자	174	12.98
	저소득층	265	19.76
소득 계층	중산층	792	59.06
	고소득층	284	21.18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인상 최소화	259	19.31
	완만한 인상	824	61.45
	신속한 인상	258	19.24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이 50.6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의 경우 ‘대졸’이 49.89%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가 33.93%, ‘대학원 재 이상’이 10.07%, ‘대제’가 6.11% 순이었다.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이 23.1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1.70%, ‘50대’가 20.51%, ‘30대’가 18.57%, ‘20대’가 16.03% 순이었다.

한편 자영업자 여부의 경우 ‘비자영업자’가 87.02%였으나, ‘자영업자’는 12.98%를 차지하였다. 소득 계층의 경우 중산층인 ‘2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59.06%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득층인 ‘600만원 이상’은 21.18%, 저소득층인 ‘200만원 미만’이 19.76% 순이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의 경우 ‘완만한 인상’이 61.45%로 가장 많았으며, ‘신속한 인상’이 19.31%, ‘인상 최소화’가 19.24% 순이었다.

### 1.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연속형으로 간주할 경우 평균은 3점 만점에 1.999점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연령’은 최저 19세에서 최고 90세까지로 나타났으며, 그 평균은 46.48세였다. ‘교육’을 연속형으로 보면, 그 평균은 4점 만점에 2.361점으로 최소값인 고졸이하와 최대값인 대학원 이상 사이의 값으로 대제보다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계층'을 연속형으로 간주하면 평균은 2.014점으로 최소값인 저소득층과 최대값인 고소득층 사이의 값으로 중간인 중산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1,341	1,999	0.621	1	3
연령	1,341	46.482	15.105	19	90
교육	1,341	2.361	1.054	1	4
소득계층	1,341	2.014	0.640	1	3

## 2.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대한 분석 결과

### 2.1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차이

자영업자 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chi^2$  검정을 하였다. 먼저 비자영업자의 경우 '완만한 인상'이 62.38%로 가장 많았고, '신속한 인상'이 20.22%, '인상 최소화'가 17.40% 순이었다. 다음 자영업자의 경우 '완만한 인상'이 55.17%로 가장 많았고, '인상 최소화'가 31.61%, '신속한 인상'이 13.22% 순이었다.  $\chi^2$  검정 결과,  $\chi^2$  값은 21.029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3.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chi^2$  검정

구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신속한 인상	완만한 인상	인상 최소화	합계
비자영업자	236 (20.22%)	728 (62.38%)	203 (17.40%)	1,167 (100%)
자영업자	23 (13.22%)	96 (55.17%)	55 (31.61%)	174 (100%)

$\chi^2 = 21.029$ , P-value = 0.000

### 2.2 소득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차이

다음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chi^2$  검정을 하였다. 먼저 '저소득층'의 경우 '완만한 인상'이 57.36%로 가장 많았고, '신속한 인상'이 21.89%, '인상 최소화'가 20.75% 순이었다.

다. 다음 '중산층'의 경우 '완만한 인상'이 62.37%로 가장 많았고, '신속한 인상'이 19.57%, '인상 최소화'가 18.06% 순이었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경우 '완만한 인상'이 62.68%로 가장 많았고, '인상 최소화'가 21.12%, '신속한 인상'이 16.20% 순이었다.  $\chi^2$  검정 결과,  $\chi^2$  값은 4.684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소득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chi^2$  검정

구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신속한 인상	완만한 인상	인상 최소화	합계
저소득층	58 (21.89%)	152 (57.36%)	55 (20.75%)	265 (100%)
중산층	155 (19.57%)	494 (62.37%)	143 (18.06%)	792 (100%)
고소득층	46 (16.20%)	178 (62.68%)	60 (21.12%)	284 (100%)

$\chi^2 = 4.684$ , P-value = 0.321

### 2.3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그러나 위와 결과는 단순히 자영업자 여부 및 소득계층 간에 차이가 있는지만 나타내는 것일 뿐, 다른 혼란변수들(confounding variables)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반드시 자영업자 여부 및 소득계층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혼란변수들을 통제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항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항 로짓분석 결과의 상대적 위험도(RRR: Relative Risk Reduction)는 대안들 간의 비교가 가능한 상대확률(Odds Ratio)로서[29], 기준범주와 비교한 다른 범주의 선택확률을 판단하기에 편리하다. 예를 들면, '인상 최소화'를 기준으로 '완만한 인상'의 선택확률을 비교할 때 상대확률이 1.0보다 작으면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의 선호가 커서 선택할 확률이 높고, 1.0보다 크면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보다 '완만한 인상'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위험도(RRR)를 보

면, ‘완만한 인상’이 0.461, ‘신속한 인상’은 0.078로 나타나서 ‘신속한 인상’을 가장 덜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종호(2016)의 결과와 유사하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 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다항 로짓분석 결과

구분	신속한 인상		완만한 인상		
	Coef. (S. E.)	RRR	Coef. (S. E.)	RRR	
성별	-0.591*** (0.184)	0.554	-0.052 (0.148)	0.950	
연령	-0.029*** (0.007)	0.972	-0.029*** (0.006)	0.972	
교육	0.029 (0.095)	1.029	0.052 (0.076)	1.053	
소득 계층	중산층 (A)	-0.460* (0.267)	0.632	-0.182 (0.227)	0.833
	고소득층 (B)	-0.881*** (0.325)	0.414	-0.516* (0.270)	0.597
자영업자 여부(C)	-2.553** (1.067)	0.078	-0.774* (0.439)	0.461	
(A) * (C)	1.835* (1.114)	6.268	0.039 (0.506)	1.040	
(B) * (C)	1.238 (1.339)	3.448	0.835 (0.606)	2.304	
절편	2.182*** (0.507)	8.863	2.776*** (0.433)	16.050	
관측치	1,341				
LR $\chi^2$ (p-value)	82.02 (0.000)				
Log likelihood	-1211.400				
Pseudo R <sup>2</sup>	0.033				

주: \* p<0.1, \*\* p<0.05, \*\*\* p<0.01

그리고 소득 계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신속한 인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완만한 인상’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고소득층은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류만희·최영(2009)의 연구 등 일반적인 재분배정책에 대해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지지를 철회한다는 결과와 같이, 재분배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부정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여부와 소득 계층의 상호작용항

을 보면, 중산층이면서 자영업자(A)\*(C)인 경우 ‘신속한 인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부호를 나타냈고 나머지 경우에서도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 부호를 나타냈다. 이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 최저임금을 신속히 인상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기준)에 비해 여성이 ‘인상 최소화’에 비해 ‘신속한 인상’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도 고연령층일수록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 모두에 부정적이어서 류만희·최영(2009)의 연구 등 일반적인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를 분석한 것과 동일하였다.

## V.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자영업자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 간의 관계를 소득 계층이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인상 최소화’, ‘완만한 인상’, ‘신속한 인상’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항 로짓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자영업자는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유의미하게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신속한 인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완만한 인상’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고소득층은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여부와 소득 계층의 상호작용항 중, 중산층이면서

자영업자(A)\*(C))인 경우 ‘신속한 인상’에 대해 유의미한 긍정적 부호를 나타내어, 자영업자가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과 ‘자영업자 위기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정 수준의 이윤도 얻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비용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자신들의 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업자를 동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해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 내에서 소득 분포가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경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된다. 그러므로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신의 수입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17],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이념이나 정부신뢰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누락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추가 자료를 확보해 엄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1] <http://www.minimumwage.go.kr>, 2019.01.24.  
 [2] 유영성, 박준식,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진단, 제308호, pp.1-27, 2018.  
 [3] 뉴스투데이,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③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높아져,” 2019.01.10.  
 [4] 매일일보, “속도조절 목소리 갈수록 커지는 최저

임금 인상,” 2018.12.09.  
 [5] 노재철, 고준기,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135-147, 2014.  
 [6] 쿠키뉴스, “[쿠키뉴스 여론조사] 최저임금, 인상 38.7% 동결 38.8% 유예 19.7%” 2018.12.19.  
 [7] 최종호, “한국의 자영업자는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가?: 2007, 2012 대선의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제1호, pp.295-323, 2016.  
 [8] 최병선,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9] 김강식,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질서경제저널, 제20권, 제2호, pp.69-90, 2017.  
 [10] 송원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나타나고 있다,” KERI칼럼, 제2018권, 제1호, pp.1-3, 2017.  
 [11] 이정민, 황승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제39권, 제2호, pp.1-34, 2016.  
 [12] D. Aaronson, S. Agarwal, and E. French, “The Spending and Debt Response to Minimum Wage Hik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02, No.7, 2012.  
 [13] 오상봉, “최저임금이 가게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5-02, 2015a.  
 [14] M. Draca, S. Machin, and J. Van Reenen, “Minimum Wages and Firm Profitability,”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3, No.1, pp.129-151, 2011.  
 [15] 오상봉,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 노동리뷰, Vol.122, pp.18-32, 2015b.  
 [16] 류건식, 강성호, 김동겸,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KIRI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05, 2017.  
 [17] 김도균, 김태일, 안종순, 이주하, 최영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 후마니타스, 2017.  
 [18] 이지은, 이재완, “사회적 약자보호정책 선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제49권, 제4호, pp.359-390, 2015.

- [19] 김현섭, 백승주,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pp.201-228, 2010.
- [20] 류만희, 최영,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 의식, 계층, 자기이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정책과학회보, 제13권, 제1호, pp.191-210, 2009.
- [21] 최영준, 이승준, “중고령층의 자영업 경험이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7년 경제 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2집, 제 1호, pp.381-402, 2009.
- [22] A. M. Meltzer and S. F. Richards,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9, No.2, pp.914-927, 1991.
- [23] P. Rehm, J. S. Hacker, and M. Schlesinger, “Insecure Alliances: Risk, Inequality,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06, No.2, pp.386-406, 2012.
- [24] 박선경, “자신의 상대적 소득수준에 대한 오인과 재분배 선호,”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1호, pp.71-100, 2017.
- [25] 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윤성도, 로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2005.
- [26] 문화체육관광부,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2017.
- [27] 송유진, “서민의 정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pp.104-114, 2015.
- [28] 강성진 외,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본 협동연구총서 10-25-05, 2010.
- [29] A. C. Cameron and P. K Trivedi,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Stata Press, 2009.

저 자 소 개

이 재 완(Jae-Wan Lee)

정회원



- 2008년 8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정보공개, 정책평가, 사회정책